

한국전쟁 시기 재일조선인 운동 재고:

지방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남기정 _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목 차 —

- I. 문제제기와 자료
- II. 조련 결성에서 해산까지
- III. 조련 해산 이후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일본공산당과 재일조선인 운동
- IV. 조국방위와 일본혁명의 틈새에서
- V. 강령초안과 백수봉 논문을 둘러싸고
- VI.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GHQ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전쟁 시기 지방에서 전개된 재일조선인 운동을 추적함으로써 재일조선인 운동의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재일조선인 운동이 에스닉 마이너리티(소수민족) 운동과 네이션(조국지향) 운동의 두 축 사이에서 대립, 갈등하고 있었다고 하여 재일조선인 운동을 양자택일적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하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NRF-2011-413-B00007)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의견을 주신 세 분의 심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정요청에 대해서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나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어서 송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작업에서 고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조국파’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조국지향’의 운동은 재일조선인을 구분하고 배제하려는 전후 일본의 대 재일조선인 정책에 가장 부응하는 방식이었다. 거꾸로 일본에 정주하는 소수민족으로서 일본의 정치에 참획하려 했던 ‘일공파’의 노선은, 일본을 여러 민족 들 사이의 평등과 공존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다민족국가로 재편하는 데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운동이었다. 그것은 당시의 일본 정부에 가장 정면에서 도전하고 그 잘못을 드러내는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러한 운동이 한국전쟁 시기에 과격한 방식으로 시도되었다고 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재일조선인 대중들은 비록 잘못된 시기일지언정, 방법을 바로 잡으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 했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한국전쟁, 재일조선인, 지방조직, 조국지향, 소수민족

.....

I . 문제제기와 자료

한국전쟁 시기 재일조선인 운동은 여전히 역사의 미궁 속에 있다. 이를 역사의 미궁에서 빼내어 복원하는 시도는 누군가에게는 상처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상처의 기억을 아물게 하기 위해 역사를 봉인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를 복원하여 이에 마주섬으로써 상처는 겨우 치유의 단계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다. 기억의 봉인과 복원 사이에서 기록은 선택의 의도를 갖지 않는다. 자료는 자료일 뿐, 독이 아니며 약도 아니다. 그저 자료가 남아 있는 한, 역사는 타임캡슐의 뚜껑을 열고 나와 그 누군가의 상처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를 증언하기 시작한다. 거기에서 치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역사가의 몫이다.

한국전쟁 시기 재일조선인 운동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는 아마도 가토 하루코(加藤晴子)의 연구일 것이다.¹⁾ 가토의 연구는 GHQ의 자료와 일본정부 자료에 의거하여 ‘조선인=폭도’론이라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논리적으로 구축하고 있었다. 이후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박경식의 연구가 그 시초라 할 수 있다.²⁾ 박경식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전개한 쪽의 자료, 즉 재일조선인 운동 시기 발표된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고바야시 도모코(小林知子)는 이 시기 자료를 읽는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³⁾ 김태기는 일본 점령 총사령부가 작성한 GHQ(General Headquarter,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자료를 구사하여 재일조선인 운동을 단속하는 입장과 이에 저항하는 재일조선인 운동을 균형 있게 접근함으로써 이 시기 운동의 작용과 반작용의 구조를 드러내 보여 주었다.⁴⁾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는 재일조선인연맹(1945년 10월 결성, 약칭은 조련)의 후속기관으로서 이 시기 재일조선인 운동을 주도했던 재일조선 통일민주전선(민전)과 조국방위위원회(조방위) 및 조국방위대(조방대)의 조직문제를 지적하고 있다.⁵⁾ 재일조선인운동을 한국전쟁의 문맥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남기정의 연구가 있다.⁶⁾

1) 加藤晴子, 「在日朝鮮人の処遇政策確定過程に見られる若干の問題について—1945年から1952年」, 『日本女子大学紀要(文学部)』, 1984.3.

2) 朴慶植,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三一書房, 1989.

3) 小林知子, 「戦後における在日朝鮮人と『祖国』—朝鮮戦争期を中心に」, 朝鮮人研究会編, 『朝鮮史研究会論文集』, 34号, 緑蔭書房, 1996, 15~50쪽.

4) 金太基, 『戦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SCAPの対在日朝鮮人政策 1945-1952年』, 勁草書房, 1997; Tae Ki Kim, “The Korean War and Korean in Japan: An Actor Analysi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17 No.2, December 2014.

5) 가지무라 히데키, 김인덕 역, 『해방후 재일조선인운동(1945-1965)』, 선인, 2014 (원저는 1980년).

6) 南基正, 「朝鮮戦争と日本—『基地国家』における戦争と平和」, 東京大学大学院博士論文, 2000, 230-276쪽; 남기정, 「한국전쟁과 재일한국-조선인들의 민족운동」, 『민족연구』, 2000.

한편 재일조선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한신교육 투쟁 등 운동이 활발했던 오사카의 재일조선인 운동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 연구들이 있다. 양영후는 “전쟁으로 인한 본국 동포들의 고통과 국토의 황폐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평화회복 운동에 결집하는 데 실패”했다는 입장에서 오사카 지역의 운동을 정리하고 있다.⁷⁾ 와키타 겐이치(脇田憲一)와 니시무라 히데키(西村秀樹)는 한국전쟁 시기 오사카 지역에서 일어난 최대의 ‘소요사건’인 스이타(吹田) 히라카타(枚方)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⁸⁾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한국전쟁 시기 재일조선인 운동의 큰 줄거리는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재일조선인의 주류와 그들에 의한 중앙에서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어서, 지방의 비주류 운동을 놓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関西) 지방은 재일조선인 운동의 또 하나의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오사카 지방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지방에서의 다양한 생각들을 포괄하지는 못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현실에서 한국전쟁 시기 재일조선인 운동의 지방에서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재일조선인 운동의 또 다른 측면을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이는 재일조선인 운동이 에스닉그룹(소수민족) 운동과 네이션(조국지향) 운동의 두 축 사이에서 대립, 갈등하고 있었다고 하여 재일조선인 운동을 양자택일적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일본공산당의 공식 노선이었기 때문에 ‘일공파’라 불리며, 후자는 ‘조국파’로 불린다. 이 글은 ‘조국파’에도 통일조국 건설을 지향하는 ‘민족파’와 북한을 조

7) 梁永厚, 『戦後・大阪の朝鮮人運動, 1945-1965』, 未來社, 1994. 107쪽.

8) 西村秀樹, 『大阪で戦った朝鮮戦争—吹田枚方事件の青春群像』, 岩波書店, 2004; 脇田憲一, 『朝鮮戦争と吹田枚方事件—戦後史の空白を埋める』, 明石書店, 2004. 그 외에 일본의 패망에서 한국전쟁 직전까지 재일조선인 운동을 다룬 최신 연구로 鄭榮桓, 『朝鮮獨立への隘路—在日朝鮮人の解放五年史』, 法政大学出版局, 2013이 있으나, 한국전쟁 시기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검토에서 제외했다.

국으로 간주하는 ‘북한파’로 나뉘는 전선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일공파’에도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연계된 ‘중앙의 일공파’와 생활거점에서 일본 ‘인민’들과 연계된 생활방위투쟁에 적극적인 ‘지방의 일공파’가 나뉘는 간극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드러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GHQ 자료가 활용될 것이다.⁹⁾ 종래 GHQ자료가 활용된 연구는 적지 않으나,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주로 재일조선인 운동의 중심에서 일어난 움직임을 쫓고 있어서, 지방의 움직임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다. GHQ 자료 가운데 총사령부 민정국(GS, Government Section)의 자료가 중요하다. 총사령부 민정국은 일본 법무부(法務府)의 특별심사국(특심국)이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을 가하여 이 시기 재일조선인 조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특심국은 1949년 5월 31일 법무부 설치법에 의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었는데, 1948년 2월 법무청에 설치된 특별심사실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특심국은 과거 특별고등경찰(특고)의 재현이라고도 할 만큼 특고 인사들이 재활용되었던 기구였다. 한국전쟁 시기의 정보를 총괄했던 제2대 특심국장인 요시카와 미쓰사다(吉川光貞)가 대표적인 특고 출신 인물이었다. 원래는 미군 점령정책에 비협조적인 인사를 조사 단속하는 기구였는데, 일본 점령 정책이 우경화하면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을 단속하는 기구로 변질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특별심사국에 특고 출신이 모여들면서 ‘특고에 준하는 기구’로 인식되고 있었다.¹⁰⁾ 법무부 산하 일개 국에

9) 주로 이 연구에서 활용되는 GHQ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Illegal Activities”(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HH, GS(B)-04258); “Immigration Law”(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HH, GS(B)-04258); “Korean Organizations: General”(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HH, GS(B)-04258-04261); “Korean War and Peace”(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BB, GS(B)-04251~04254); “Organizers”(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HH, GS(B)-04258).

10) 吉川光貞, 「特別審査局の沿革と使命」, 竹前栄治, 『戦後労働改革』, 東京大学出版会, 1982.

지나지 않은 특별심사국은 1949년 1월 시점에 250명에 불과했으나,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1일 시점에 그 두 배인 537명으로 증원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1달 반만인 8월 18일에는 또 다시 그 두 배인 1145명으로 증원되었다. 그리고 특심국은 일본 전국 9곳에 지방주재관을 두고 전국적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었다.¹¹⁾ 재일조선인의 지방조직에서의 움직임은 이러한 특심국의 감시망에 잡혀 특심국 본국을 거쳐 GHQ 민정국에 보고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GHQ 민정국 자료는 현재로서는 재일조선인의 지방에서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¹²⁾

이하 본론으로 들어가 제2장에서는 조련 결성에서 해산까지를 중심으로 재일조선인 운동의 지도자들이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그 구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조련 해산에서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일본공산당과 재일조선인 조직 중앙의 움직임을 개관하고 이에 대비되는 지방의 움직임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1951년 일본공산당이 급격히 무장투쟁과 군사노선으로 기우는 시기의 재일조선인 운동을 지방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재일조선인 운동의 노선전환을 둘러싼 논쟁을 강령초안과 백수봉 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와 관련한 지방의 움직임을 대비시켜 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그러한 지방에서의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는 재일조선인 운동의 새로운 특징을 추출하고, 그 현재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11) 荻野富士夫, 『戦後治安体制の確立』, 岩波書店, 79・137쪽.

12) 그 외에 이 시기 재일조선인 연구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기본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全5卷), 三一書房, 1976;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戦後編』(全10卷), 不二出版, 2000; 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全15卷, 補卷), アジア問題研究所, 1982~1991. 그 외에 재일한인의 역사를 정리한 다음의 연표중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연표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姜徹編, 『在日朝鮮・韓国人史總合年表』, 雄山閣, 2002, 284~326쪽,

Ⅱ . 조련 결성에서 해산까지

정주민으로서 소수민족 운동을 지향할 것인가, 언젠가 돌아갈 조국과의 일체성을 중시하여 재외 국민으로서의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는 전후 직후 재일조선인 운동이 마주친 중심 주제였다.

재건된 전후 일본공산당의 기관지 『전위(前衛)』 창간호(1946년 2월 15일)에는 조선인 운동의 지도자 김두용의 논문 「일본에서의 조선인 문제(日本における朝鮮問題)」가 실려 있다. 거기에서 김두용은 ‘일본에서의 조선인 문제는 민족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단계 과제는 ‘조선의 완전한 독립, 인민공화국의 건설’이었다. 그러나 그해 말 김두용은 논문 「조선인 운동은 전환하고 있다」에서 “일본에서의 조선인 운동은 기계적으로 조선 쪽으로 기울어져 왔다”면서 그 결과 “한편으로는 조선의 민주주의민족전선에 한쪽 다리를 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민주주의혁명운동에 다른 쪽 다리를 걸치는 활동을 하는 형국이었다”고 총괄한 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청산하고 이제는 재일 조선인 운동의 실질적 조직적 임무는 ‘천황제 타도’와 ‘반동정부 타도’라는 일본 혁명을 명확히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재규정했다.¹³⁾ 즉 재일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운동은 애초에 설정했던 네이션 지향에서 에스닉그룹 지향의 운동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1947년 2월 27일에는 김두용이 조련의 ‘부르주아적 개량주의적’ 체질을 문제삼는 논문을 발표했다. 「조선인 운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朝鮮人運動の正しい発展のために)」에서 김두용은 조련이 혁명적 대중운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료주의에 빠져 부패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고 하여, 격렬한 어조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재일조선

13) 『前衛』 14号, 1947.3.1., 13~14쪽.

인이 민족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일본 인민, 특히 일본의 프롤레타리아트와 연대하는 계급적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조선인 운동을 일본의 전 혁명운동에 올바르게 연결하여, 이를 완전히 일체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운동의 일대전환’을 요구했던 것이다.¹⁴⁾ 재일조선인 운동을 일본공산당이 지도하는 일본혁명에 일체화하려는 김두용 등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방침은 조련에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1947년 3월 19일에 발표된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국의 지령 71호 「조선인들 사이에서의 활동방침(朝鮮人間における活動方針)」에서도 이 점은 강조되고 있다. 지령의 제1호는 조선인 운동이 “일본의 혁명운동과 긴밀히 결합되지 않고, 별개의 독립적 운동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조련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재일 조선인 대중 가운데 노동자 농민 계급이 부재하고 대부분이 실업자인 현실에서 개량주의적 편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나아가 조선인을 ‘민족’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여 조련을 일본공산당의 기본노선에 충실하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여간해서 개선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또 다른 재일조선인 공산주의자 지도자인 정동문은 1948년 9월 8일, 일본공산당 간토(關東) 지방 조선인 당원회의에서의 일반보고에서 조선인 운동이 노동자적 감각과 계급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조선인이 모두 민족운동이 아니라 일본에서 영주하는 노동자 농민의 기분을 갖고 ‘생활옹호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문의 보고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적이 있었다. ‘조국정세보고’를 하는 가운데 그는 재일조선인이 ‘조국정세’라 할 때 주로 ‘이승만’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 ‘남조선’의 정세를 중심으로 사고해 왔던 데에서 탈피하여 ‘조선의 민주세력’이 이룬 성과에 대해

14) 『前衛』 16号, 1947.5.1., 16~17쪽.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의 민주세력’이란 ‘북조선’을 가르키는 것이며, 그 성과는 이제 곧 수립될 ‘북한의 정권’이었다. 즉 이 보고는 앞으로 재일조선인에게 조국은 ‘북조선’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동문의 보고에서 이 내용이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즉 정동문은 이 보고를 마치 못해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정동문의 보고는 ‘조선인당원 회의’에서의 보고였으며 그 시점은 9월 8일이었다. 이 시점에서 보면, ‘조국정세보고’는 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문의 ‘조국정세보고’는 부차적이고 작게 다뤄지고 있다. 정동문과 재일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보기에 재일조선인에게 중요한 문제는 ‘조국’이 아니라 ‘여기 이곳에서 살아가며 투쟁하기’였던 것이다. ‘민족감정에서 생겨나는 민족주의의 편향’과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편향’이라는 두 가지 편향으로부터 조선인 운동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정동문의 보고문이 설정한 목표였다.¹⁵⁾

1945년 10월에 결성된 이래 조련은 이러한 일본공산당의 조선인 당원에 의해 지도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일본 안의 소수민족으로서 일본의 정치정세에 조응하여, 조국방어를 위한 일본혁명에 나설 것을 요구 받아 운동을 전개하던 조련은 1949년 9월 8일 우에다(殖田) 법무총감이 내린 법무부 고시 제51호에 의해 해산 명령을 받았다. 조련은 전국의 48개 본부와 620개 지부 및 1,214개 부회가 해산을 당했고, 그 구성원의 수는 36만 5,792명이었다.¹⁶⁾

조련이 해산되는 시점에서도 조련의 활동을 둘러싼 이러한 혼란은 수습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정동문의 다음 보고문에서는 조선인 공산주의

15) 鄭東文, 「新しい段階における在日本町先人運動と共產主義者の任務(1948年9月8日, 關東地方朝鮮人黨員會議における一般報告)」, 23-52쪽.

16) 朴慶植, 1989, 241쪽.

자들 사이에서 조련의 해산을 오히려 환영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련 해산 직후 1949년 10월 2일에 열린 간사이 지방 조선인당원회의에서 정동문은 「전환기에 선 재일본조선인운동과 공산주의자의 임무(轉換期に立つ在日本朝鮮人運動と共產主義者の任務)」에서, 대중단체이자 투쟁의 조직이어야 할 조련이 정당도 대사관도 아니면서 그렇게 행동해 온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료화와 부패’가 진행되어 ‘기회주의적 경향’마저 보이던 조련의 해산은 오히려 “환영할 만한 것”으로 재일조선인은 이제야 비로소 “계급투쟁과 대중운동 속에서 진정한 스스로의 조직을 쟁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총괄하고 있다. 여기에는 민족청산주의적 태도가 짙게 묻어나고 있다.¹⁷⁾ 일본공산당의 조선인당원 리더들은 일본 내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운동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Ⅲ. 조련 해산 이후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일본공산당과 재일조선인 운동

조련이 해산당한 뒤 일본공산당은 이에 대한 유효한 대응을 조직화하지 못하고 ‘폭로전’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었다. 미지근한 대응 때문에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불만을 사던 일본공산당은 1950년 1월 6일, 적극적인 대미투쟁을 개시하라는 ‘코민포름 비판’을 받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3월 22일, 노사카 산조(野坂參三)와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 등 이른바 주류파가 지도하는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전인민 제군에게 호소함’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 수준에서는 대립을 수습했다. 그러나 지방 조직에서는 여전히 당 중앙에 대한 불신을

17) 「朝連, 民青の解散について」, 日共中央委員会組織活動指導部, 1949年 9月 8日.

표출하는 움직임들이 이어졌다. 특심국 자료들은 일본공산당의 지방조직이 ‘코민포름 비판’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도야마현, 돗토리현, 오카야마현 등의 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적극적인 발언들이 잇달았고, 교토와 시코쿠 지방위원회 등에서도 ‘코민포름 비판’을 환영하며, 일본의 공산주의자들의 임무가 분명해졌다고 하여, 적극적인 대미투쟁에 나서려 하고 있었다.¹⁸⁾

그러한 움직임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더욱 분명해졌다. 주고쿠(中国) 지방위원회는 7월에 개최된 제30회 확대회의에서 ‘임시 중앙지도부에 대한 의견서’를 공산당 각 기관에 배포하고 주류파가 장악한 중앙지도부의 방침을 비판하고 공공연히 이에 반대했다. 주고쿠 지방위원회는 국제파로 분류된 하라다 초지(原田長司)가 장악하고 있었고, 시마네현 지구위원회를 제외한 산하 각 기관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임시중앙지도부 및 통제위원회는 8월 12일, ‘주고쿠 지방의 동지 제군에 호소함’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주고쿠 지방위원회의 움직임을 ‘분파주의적 관료주의적, 극좌적,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판한 뒤, 이는 적을 이롭게 하는 배신행위일 뿐이므로, 지방 당원 전원이 단결하여 이들 분파주의자들과의 투쟁에 나서도록 촉구했다.

한편, 간사이(関西) 지방위원회도 국제파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간사이 지방위원회 간부들 6명은 8월 1일, 「당의 혁명적 통일을 위해 전당의 동지 제군에 호소함(党の革命的統一のために全党の同志諸君に訴える)」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 지도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임시중앙지도부 및 통제위원회는 8월 16일, 간사이 지방위원회 의장 등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간사이 지방위원회는 중앙당 정치국원 시가 요시오(志賀義雄)의 지반이었다. 미야모토 겐지(宮本顕治)와 함께 국제파로 간주되던 시가는 중앙지도부가 무장투쟁방식을 공식화하자

18) 法務府特別審査局, 『日本共産党の動向(自昭和24年8月至昭和25年8月)』, 1951.8, 64쪽.

이에 반대하여 임시중앙지도부에 저항하고 있었다.

주고쿠와 간사이 등에서 중앙의 주류파와 지방의 국제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을 무렵 일본공산당에 대해 ‘코민포름 지령 제172호’가 전달되었다. 종래 이 문건은 일본공산당의 과격한 반미투쟁을 부각시키기 위해 날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그 신빙성이 의심되기도 했다.¹⁹⁾ 그러나 지령이 전달된 시점이 한국의 전선에서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어 북한군의 진격이 멈추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령의 형식은 날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비슷한 내용으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아무튼 8월 14일자 GHQ의 보고에 따르면, ‘코민포름 지령 제172호’는 발전소와 송전시설을 파괴하여 일본 경제를 마비시킬 것, 우익 반동을 차단하고 우익 반동의 운동체 내부에 침투하여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것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즉, ‘중국공산당과 일본의 경찰 사이에 연락이 되었으니, 8월 15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총궐기하라’고 요구하며, 이에는 ‘비밀당원, 구 조련연맹원, 중국공산당 공작원 등 50만 명이 참가할 것이며, 12만 내지 13만정의 권총 급 무기를 이미 입수했다’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다.²⁰⁾

그러나 실제로 이 시기에 이러한 내용의 투쟁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일본의 매체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일본공산당 중앙은 이러한 지령을 실행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코민포름의 지령은 일본의 관헌에 의해, 일본공산당을 탄압할 구실과 경찰예비대 창설의 이유로 활용되었고, 국제파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일본공산당의 내분은 더욱 커졌다.

코민포름의 지령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저항을 전개하지 못하는 상

19) 和田春樹, 『朝鮮戦争』, 岩波書店, 1995, 125~126쪽.

20) 「특별보고」(1950.8.14), “Japan Communist Party Underground Activities, A-100.41,” GHQ/GS.

황을 보면서 국제파는 더욱 분명한 태도로 당중앙의 지도에 저항하고 있었다. 미야모토와 시가 등 분파주의자로 제명 등의 처분을 받은 국제파는 중앙지도부에 반대하는 당원들을 규합하여 8월 31일, 오사카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9월 1일에는 「당의 혁명적 통일을 위한 성명(党の革命的統一のために声明する)」을 발표하고 ‘일본공산당 전국통일위원회’의 이름으로 조직적인 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성명’은 일본공산당의 최대 임무를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전개하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과 그 주구인 일본의 반동세력의 내외에 대한 반동정책에 대하여, 세계의 평화옹호세력과 함께 일본 인민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것에 있다’고 하여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9월 3일의 『런민일보(人民日報)』 사설은 이에 대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대답이었다. 사설은 일본공산당 임시중앙의 노선으로의 ‘일본인민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파에 대해 분파활동을 그만두고 주류파와 통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²¹⁾

이 결과 일본공산당 전국대표자 회의가 9월 17일과 18일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장소는 일본공산당 본부였다. 도쿄에는 두 곳에 비밀 집회소가 있었으나, 이 회의에는 비밀 집회소가 이용되지 않았다. GHQ의 보고에 따르면 이 회의와 관련하여 키스렌코라는 자가 일본에서의 공작을 위해 베이징 경유로 일본 국내에 잠입해 들어와 있었다. 특심국의 보고에 따르면 키스렌코는 베이징에 설치된 ‘극동 혁명전선 통일위원회’라는 조직의 위원으로 그가 일본에 도착한 직후인 9월 2일, 즉 국제파의 ‘전국통일위원회’가 결성된 다음날, 일본공산당 중앙지도부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지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즉 ‘키스렌코 지령’은 현재의 주어진 조건에 대응해 일본과 중국의 ‘두 공산당의 협력을 가능케 할 조직’으로서 ‘일본 혁명전선 통일위원회’를 설치하고 강화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분파활동에 대해서는 주류파가 장악한 ‘통제위원회’에 대해 권한을 남용

21) 和田春樹, 『朝鮮戦争』, 岩波書店, 1995, 126-127쪽.

하지 말 것, 두 분파의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내용의 지령을 내리지 말 것 등을 지시했다.²²⁾

그 배경에는 일본공산당 조직의 온존을 위해 주류파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공산주의의 요청에 미지근한 주류파와 달리 국제파가 오히려 소련 및 중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현실이 있었다. 대일이사회의 소련대표부 정치고문 보좌로 일본에서 상황을 관찰하던 세르게예코의 보고가 이를 지적하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에서 한국에서의 전쟁 발발에 대한 일본공산당 지도부(주류파-필자 주)의 입장에 대해 ‘기묘하다’고 표현하고, 일공 지도부가 일본 인민에 대해 ‘미 침략자가 일본을 중계수송기지로, 제2전선의 공군기지로, 병원으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투쟁에 일어나도록 독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신 일어서고 있는 것은 조선인 노동자들이며, ‘분파주의자’들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9월 4일에는 소련대표부에서 일본공산당 소속 의원들과 소련대표들과의 회담이 열려, 민족전선의 강화, 노동자 농민 및 교육현장에서의 투쟁 방침, 합법당과 지하조직의 동시 확보 등의 문제에 대해서 토의가 진행되었다.²³⁾ 그럼에도 일본에서 일본공산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반미투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GHQ조사 「일본공산당과 소련」의 10월 16일자 보고 「일본공산당 최고지도자의 지령에 관하여」에 따르면, 10월 9일에는 노사카 산조의 양녀로 모스크바에 체류하던 이와타 미사코(岩田みさこ)가 일본공산당 최고지도부의 지령을 전달하기 위해 잠입하여, 10월 11일에는 임시중앙지도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의회에서의 전면강화 쟁취를 위한 투쟁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일본공산당의 활동

22) 「전국대표자회의」(1950.9.19), “Communism in Japan,” GHQ/GS.

23) 「소련대표부에서의 일본공산당 대표와의 회의 일반 결정(9월 4일)」(1950.10.9), “Japan Communist Party Underground Activities, A-100,41,” GHQ/GS.

전반에 대해서는 ‘일본공산당은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었다.²⁴⁾

한편 조련이 해산을 당한 뒤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한국전쟁의 현실 속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조국의 현실과 삶의 터전인 일본에서의 사태전개에 휩쓸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하고 나아가 민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민단 계열 재일한인들은 자원군을 조직해서 전쟁에 직접 참여했고, 조련의 맥을 이으며 조국의 분단에 반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에 기대를 걸었던 재일조선인들은 일본혁명이 곧 조국방위라는 입장에서 격렬한 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조련의 후속기관으로 1951년 1월에 조직된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이 시기 민전과는 별도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조직된 조국방위위원회(조방위)와 조국방위대(조방대)가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주일미군과 요시다 정부, 민단을 상대로 과격한 투쟁을 전개했다. 조방위와 조방대는 조련 해산 직후에 만들어진 일본공산당의 민족대책부(민대)가 지도하고 있었고, 일공의 조선인 당원들이 민대를 주도하고 있었다.

중앙지도부의 조방대 설치결정에 따라, 각 지역에서 조방대가 결성되었는데, 반드시 순탄치 않은 않았던 것 같다. 규슈 지방에서는 8월경부터 행동대의 조직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구 민청 규슈지부의 강수홍(姜壽弘) 등 세 명이 칙령 311호 위반으로 구속되고, 이어서 구 민청 중앙위원 정일(鄭一) 등 네 명이 구속되는 등 중심인물을 잃고 난 뒤 조직화 움직임은 지체되었다.²⁵⁾ 한편 같은 규슈 지부에서는 기존의 조직을 통해 조선인 운동을 재건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7월 15일과 16일의 양일간에 오이타현 벳푸(別府)시에서 열린 민전준비위원회 규슈지방회의에서는 해

24) 「일본공산당의 최고지도자의 지령에 관하여」(1950.10.16.), Ibid.

25) Ibid.

방구원회, 여성동맹, 학생동맹 등의 조직이 정치조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조직은 ‘단체등규정령(団体等規正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따라서 당국에 대한 신고를 거부할 방침이 결정되었다. 만일 당국이 강제력을 동원한다면 신고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조직이 정치적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당국에 인식시키고, 각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침이 일본 전국의 지방위원회에서 공유되었는지, 1950년 9월 말 현재 이들 단체의 신고는 확인되지 않았다.²⁶⁾ 즉 중앙에서의 방침과는 달리 지방의 경우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한 투쟁조직으로의 전환은 그리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반면 지역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조방대와는 별도의 조직의 형태로 독자적 판단에 따른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1950년 9월경에는 시즈오카(静岡)시의 조련의 청년조직인 민청원 약 10명이 혈맹단을 조직했다는 보고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앞서 민청 간부 수명이 권총 소지 용의로 구속되었는데, 혈맹단은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이라는 것이다. 특심국은 혈맹단의 원래 조직은 청년행동대인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²⁷⁾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우에 따라 청년행동대는 혈맹단과 같은 무정부적 조직으로 변질되기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코민포름 지령 제172호’에 따른 무장봉기가 실제로 시도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사실로 주목된다.

혈맹단 조직이 발각된 시즈오카현은 전쟁 초기 한국의 전선과 직결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고텐바의 훈련장에서 한국군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이로부터 한국으로의 병력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0년 10월 17일에는 유주권(柳周權, 28세 일본공산당 동부지구위원회 위원)과

26) Ibid.

27) 「좌익 조선인 청년 그룹의 혈맹단 결성에 관하여」(1951.1.11), Ibid.

김승묵(金承默), 일본인 이토 유(伊藤勇) 등이 훈련을 마치고 전선으로 투입되기 전에 휴식을 취하고 있던 한국군 병사들에 대해 탈영을 교사하며 선동하다가 일본 당국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이를 보고하고 있는 요시카와가 작성한 조서에 따르면 이들은 네댓 명의 한국인 병사를 탈주시키는 데 성공한 모양이라고 분석하고 있다.²⁸⁾ 이러한 운동의 양태도 중앙의 지령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자발적 독자적 운동이었다.

이상의 사실에서 볼 때, 재일 조선인 조직의 특징으로 상당한 범위에서 지방조직의 자립성이 용인되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조련이 해산당한 뒤 중앙조직이 와해되고 만 점을 우선 들 수 있으나, 조련 시대부터 지방조직이 상대적으로 강력했으며, 나아가 중앙지도부가 지방의 사정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중앙-지방 관계의 특징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게 될, ‘조국방위’와 ‘일본혁명’을 둘러싼 논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IV. 조국방위와 일본혁명의 틈새에서

1951년 들어 혼선을 거듭하던 재일조선인 운동과 일본공산당 운동은 점차 조직 차원에서는 정리되는 경향을 보였다. 1951년 1월 9일 재일조선 통일민주전선이 결성되었고, 같은 해 2월에는 일본공산당 제4회 전국협의회가 비밀리에 개최되어 조직과 운동전선이 통일되었다. 그것은 이른바 군사방침이라고 일컬어지는 노선으로서, 「일본공산당의 당면의 기본적인 행동방침(日本共産党の当面の基本的行動方針)」에서 정식화되었다. 같은 문건에서 ‘소수민족 특히 조선, 중국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익과 권

28) 「27번 자료」, “Korean War and Peace” GHQ/GS.

리를 지키는 투쟁에 적극적인 노력과 원조를 실시”하고, 재일 소수민족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재일조선인은 독립한 국가의 재외국민이 아니라, 일본 인민의 일부라는 생각이 여전히 일본 공산당의 주류들의 생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공산당 내의 주류파와 국제파의 노선투쟁은 1951년 8월 코민포름이 주류파를 지지함으로써 주류파가 승리하고, 이후 국제파는 조직상으로는 사라지게 되었다.

통설로서는 이로서 재일조선인 운동은 더욱 일본공산당과의 연계가 강화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방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간단히 정리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시가(滋賀)현에서는 구 조련 소유의 건물 일부를 1951년 5월 19일부로 민단이 임차했다는 것이 발단이 되어 조련의 맥을 잇는 해방구원회와 민단간의 투쟁이 격화되었다. 일본공산당이 오류로 판정한 ‘민족주의’의 요구가 시가현의 재일조선인 운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중앙의 요구는 시가현에도 관철되어, 시가현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1951년 5월 23일이 되어 서야, 구 조련 맹원을 중심으로 조국방위대가 조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국지향’의 경향은 재일조선인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방편이었다. 시가현에서는 해방구원회가 중심이 되어 문화공작대를 조직하여, ‘조선어강좌’ 등을 개최하고, 『조선신보』, 『국회정보』, 『신조선』, 『전선』, 『전망』 등의 이름으로 기관지를 배포했다. 문화공작대가 전개한 활동에는 슬라이드 상영회도 있었는데, 7월 24일에 개최된 오쓰시의 상영회에서는 ‘미군의 조선인 학살, 테러, 강간 등을 고발’하고, 일본에서의 미군의 군사훈련을 폭로하는 내용이 상영되었다. 상영회 현장에 내걸린 슬로건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미국의 조국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는 일본에서 조국방위 투쟁에 궤기하자!’는 것이었다.²⁹⁾ 일본의 군국주의가 미국과 함께 조국을

29) 「시가현 내 조선인 조직의 동향」(1951.7.25), “Korean Organizations: General,”

침략하고 있다는 인식, 재일조선인은 일본에서 ‘조국방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인식이 특징적이다.

1951년 6월에는, 무기밀수에 관한 정보가 GHQ에 보고되었다. 특심국 사무관 시마다(島田)가 노영구(盧永九)라는 인물을 정보원으로 하여 작성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사할린 남해안으로부터 무기를 적재한 어선이 레이분(禮文)도에 마련된 거점에 도착, 그로부터 홋카이도 왓카나이(稚内) 방면으로 출항하는 어선이 이어 나르는 방법으로 무기 밀반입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은 구 일본군 장교들이 사용하던 권총과 일제 수류탄이며, 권총이 약 800정, 수류탄이 약 200개로 1951년 4월과 5월 사이에 14회 이상에 이르는 빈도로 이러한 밀반입이 시도되었다고 한다.³⁰⁾ 그러나 이 시기에 전개된 공산당 계열의 혁명운동이나 재일조선인의 반미투쟁의 과정에서 이러한 무기가 사용된 예는 전무하다. 정황으로 보아 재일조선인에게도 이러한 무기가 주어졌고 실제 훈련에서 그 사용법이 가르쳐지기도 했다는 보고는 확인된다.³¹⁾ 일본공산당 4전협의 강령이나, 조방위 조방대의 방침으로 보아서, 실제로 무기가 지급되고 있었다면 무력을 사용한 대중봉기는 일어나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방 수준에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실행이 유보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에서는 오히려 평화옹호운동이 주조를 이루었다. 이는 조직상 정리된 국제파가 실질적으로는 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GHQ/GS.

- 30) 「사할린으로부터 홋카이도오를 향한 밀수에 관한 조선인 盧의 증언」(1951.6), “Illegal(per se, Illegal) Activities,” GHQ/GS.
- 31) ‘조방대의 활동에는 정확함과 철저한 비밀유지가 요구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비밀유지를 위해 조방대 조직 및 무기 등에 암호명이 붙여졌다. 예컨대 ‘조방대는 ‘꼬치집(くし屋)’, 대장은 ‘지점장’, 대원은 ‘꼬마(小僧)’, 다이너마이트는 ‘소주’, 권총은 ‘맥주’, 수류탄은 ‘사이다’, 최루탄은 ‘라무네(ラムネ, 레모네이드)’ 등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서인지 이 시기, 즉 1951년 9월에 개최된 한 반성회에서는 재일조선인 대중이 투쟁노선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현상과 간부급 지도자들의 저질화가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행가능한 일본인과의 공동투쟁은 전면강화 문제에 관한 투쟁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정예분자 확보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민전이 혁명적 요소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시기 하카마다 사토미(袴田里見)의 자아비판 및 당복귀와 함께 국제파 조선인 공산당원들도 복귀해 왔다. 이에 대해 민전 지도부는 일단 이들을 받아들이며 서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여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³²⁾

한편 민전 제4회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9월 30일에는 주고쿠 지방위원회가 해산되었다. 주고쿠 지방은 분파주의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었다. 10월 10일에는 분파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히로시마현에서 임시 지도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주고쿠 지방위원회 지도부 가운데 윤성순(尹聖淳), 여수연(呂秀淵), 최해문(崔海文), 김삼포(金三浦), 주고쿠 지방위원회 국제부의 박진세(朴珍世), 김종실(金宗實), 김동욱(金東旭), 그리고 민전 중앙에서 파견 나온 민영일(閔泳一)이 참가했다. 회의에서는 민전 주고쿠 지방위원회 통일대회 준비를 위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10월 20일에 통일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³³⁾

일본공산당 제5회 전국협의회(5전협)이 개최되는 것은 바로 이 시기이다. 1951년 10월 16과 17일 5전협이 개최되어 「일본공산당의 당면의 요구: 새로운 강령(日本共産党の当面の要求—新しい綱領)」, 이른바 신강령이 채택되었다. 신강령에서는 4전협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재일조선인을 ‘소수 민족’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부정되고 일본 내 ‘제민족(諸民族)’의 하나로

32) 「일본 내 좌익 조직의 동향」(1951.9.10), Ibid.

33) 「조선인 조직의 동향에 관한 월간 보고(10월)」(1951.11.17), “Korean Organizations: General,” GHQ/GS.

간주하고 일본 내 제민족의 굳건한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민족과 동등한 지위가 주어졌으며, 그에 따른 운동의 독자성이 인정된 것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재일조선인 운동도 무장투쟁 방식, 군사노선으로 치닫게 되었고, 그것도 일본공산당과는 조직적으로 구별되는 독자적 조직으로서 전개되는 형식을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방위는 10월 21일, 「재일조선인 당면의 투쟁 방침(在日朝鮮人当面の鬭争方針)」이라는 지령을 하달했다. 재일조선인의 당면 투쟁은 재일조선인의 생존권요구, 미제국주의 추방, 민족해방에 있다고 하여, 5전협약의 결과 일본공산당의 조직으로 설치되는 '중핵자위대'의 성격을 갖는 조방대 편성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조방대의 재일조선인은 일본공산당의 중핵자위대와 함께 연대하여 1951년 말부터 1952년 중반까지 전국에서 화염병 투쟁으로 상징되는 반제, 반미 무장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간단히 일직선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GHQ자료에는 12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화염병 투척을 포함한 소요시위가 잇달았음을 알 수 있는 보고들이 실려 있다. 12월 한 달 만 해도, 12월 1일 오사카시의 히가시나리(東成) 지구, 12월 3일 미야기현 나토리(名取)군, 같은 날 아이치현 한다(半田)시, 12월 11일 다시 아이치현의 한다시와 이치노미야(一宮)시, 12월 17일 오사카, 12월 18일 시가현의 아사히(旭)촌, 가자키(神崎)군, 가모(蒲生)군 등, 12월 21일 오이타현의 와카쿠사공원(若草) 등에서의 집회 및 데모가 확인된다.

이상의 GHQ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집회, 농성, 데모행진에 대한 보고는 극히 일부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 시기에는 일본 전국의 각지에서 민전과 조방의 지휘체계가 갖춰진 곳에서는 이와 비슷한 군중대회가 잇달았던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주고쿠지방에서의 군중대회에 대해서는 보고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 지역에서는 코민

포름 비판 뒤 분열된 조선인 조직을 수습하지 못하고 아직도 조직 재건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연된 민전 제2회 전국대회를 앞둔 12월 2일에서야 겨우 야마구치현에서는 현위원회가 조직되는 판이었다.³⁴⁾ 물론 이는 해산된 주고쿠 지방위원회 재건을 위한 움직임이었으나, 아직도 조직으로서의 통일성을 갖기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를 넘긴 1952년 1월 중순, 민전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이강훈과 동 중앙위원 김은순이 직접 야마구치현을 방문하고, 민전과 조방을 총괄할 단일한 조직의 설치를 지시했다. 1월 13일을 전후해서는 이들은 히로시마현을 비롯, 시마네현, 돗토리현 등을 같은 목적으로 순방한 뒤, 시코쿠를 방문하여 1월 말까지 각지를 돌며 이러한 지침을 전달한 것이 확인된다.³⁵⁾

이러한 움직임에 곤혹스러워하는 재일조선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일본 공산당의 5전협의 방침에 따라 과격한 투쟁을 벌이기를 요구하는 재일조선인 중앙에 반발하고 있었다. ‘일공파’에 대립해서 ‘조국파’가 대두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 무렵부터였다. 1951년 말부터 민전 내부에서 민전 강령의 제7항,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수’ 조항을 놓고 대립과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1951년 12월 12일로 예정된 민전 제2회 전국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회의에서 민전 강령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수’ 조항을 빼는 것으로 강령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나온 데 대한 논쟁이었다. 제안자는 민대의 박은철이었고, 그 이유는 민전 강화를 위해 중간파와 민족파도 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덕수가 반박했으나, 결국 12월 12일에 개최된 민전 제2회 전국대회에서 통일전선조직의 확대강화 방침에 따라 이강훈의 제안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수’ 조항 삭제가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후 강령(초안)에

34) Ibid.

35) 「조선인 조직의 동향에 관한 월간 보고(1월)」(1952.2.14), Ibid.

서 위 조항이 삭제된 문제를 둘러싸고 ‘조국파’와 ‘일공파’ 사이의 노선대립이 심각해졌다.

V. 강령초안과 백수봉 논문을 둘러싸고

1951년 12월 12일에 제안된 강령 개정은 이후 1952년 5월 민대에서 초안 작성이 진행되어 이른바 ‘민족강령초안(강령초안)’으로 알려진 문건이 제출되었다. 강령초안에는 비록 민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내 걸고 전진한다”고 선언하고 있기는 하나, 재일중국인과 기타 재일 제민족과 연대하여 싸우며, 일본의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당, 즉 일본공산당에 의해 지도를 받는 노동자 농민과의 동맹을 주력으로 하는 민족해방민주통일전선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고 하여, ‘미제로부터의 일본의 해방’과 ‘일본혁명’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었다.³⁶⁾

이와 동시에 백수봉이라는 펜네임으로 한덕수의 반박 논문이 발표되었다. 「애국진영의 순화와 강화를 위해(愛國陣營の純化と強化のために—社会民主主義路線と傾向を排撃しよう)」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한덕수의 반박 논문은 10개 항목의 제1항에서 “애국적이고 인민적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 중앙정부의 정책 및 시정을 지지하는가 아닌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백수봉 논문의 등장을 우리는 ‘북한파’의 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받아들여 민전에서는 제6회 확대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호 방위’ 조항이 부활되어 강령에 포함시킬 것이 결정되었다. ‘조국파’가 ‘북한파’로 순화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36) 朴慶植, 336쪽.

일본공산당의 5전협 노선이 살아 있는 한 재일조선인 운동이 독자적 ‘민족’운동이면서도 일본혁명에 복무하는 구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1952년 6월 1일 발표된 민대의 백수봉 논문에 대한 재반박문이 이를 반영하고 있었다.³⁷⁾

재일조선인 운동의 지방조직이 이 때처럼 활발히 자신이 의견을 개진한 적은 없었다. 오사카 지방위원회는 민족대책부 확대회의의 결과를 정리해서, 8월 25일자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우선, 강령초안이 신강령의 일부를 이룬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 당의 신강령에 강령초안을 일부로서 부가한다는 의미인가. 만일 그렇다면, 이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아니면, 신강령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재일조선 인민을 해방하는 강령이라는 의미인가. 만일 그렇다면, 이는 분명히 당과 대중단체를 혼동하는 트로츠키스트적 사상이다. 우리 당의 강령은 신강령 단 하나뿐이다”고 하여 ‘강령초안’을 비판했다.³⁸⁾ 이는 ‘중앙의 일공파’가 국제공산주의의 요구를 수용하여 재일조선인 운동을 한국전쟁에 깊숙이 개입시키려 하는 데 대한 ‘지방의 일공파’의 저항이었다.

오사카 지방위원회의 저항은 집요했다. 같은 날, 오사카 치부네 사부로(千舟三郎) 명의로 제출된 「상신서(上申書): 재일조선 민족의 당면 요구 강령초안을 읽고」라는 문건은, ‘강령초안’의 기저에 흐르는 사상이 “명백히 민족주의적 편향을 범하고 있는 것이며,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는 구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민족적 이익을 세계인민의 이익보다 우위에 두고자 하는 사상”이라고 하여 비판했다. 나아가, 이러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여 성급함과 초조감이 자라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초조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탕주의적 행동이, “투쟁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다수

37) 朴慶植, 340~341쪽.

38) 「在日朝鮮民族綱領草案に対する意見」, 大阪府民対(1952年8月25日), 『朝鮮問題資料叢書』, 第15卷, 142頁.

의 대중에게 기회주의를 심어주고, 일본 국민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격렬히 비판했다.³⁹⁾

한편, 규슈의 경우 8월 초순에 제출된 「민전 강령초안에 대한 규슈 V (전위, vanguard의 머리글자로 활동가 사이에서 사용된 은어) 제1차 의견」이라는 문건을 통해 강령초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7월 6일자 조방위 규슈 지방위원회 보고가 정예주의적 편향에 빠져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일본공산당 민족대책부와 조방위 사이에서 당은 조선인 운동의 권위로서 완전한 장악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과 재일조선인 조직 사이에는 여전히 서로 대립하는 장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한편 가나가와현 민족대책부도 당의 제 방침을 기본적으로 바르다고 하여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⁴¹⁾

그러나, 1952년 12월에 개최된 서일본지구 민족대책부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강령초안’의 민족주의적 편향에 대한 비판이 잇달았다. 회의는 오사카, 오카야마(岡山), 히로시마, 시가, 효고, 교토, 야마구치, 나라 등의 현 대표와 몇몇 중앙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오사카 대표의 맹렬한 비판으로 회의는 개시되었다. 이 회의는 재일조선인 운동에 ‘지방의 일공파’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다.

오사카 대표는 ‘강령초안’이 “재일조선인 운동을 적의 후방기지에 투입된 낙하산 부대로 규정하고, 군사기지, 군수품의 생산 및 수송 분쇄투쟁을 가장 중요한 의무로 부과한 결과, 생활거점, 생산거점에 입각한 투쟁을 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이해를 낳는 근원이 되고 있다”고 비판

39) 「上申書, 在日朝鮮民族の当面する要求綱領草案を讀んで」, 大阪, 千舟三郎, (1952年 8月25日) 『朝鮮問題資料叢書』, 第15卷, 142-143쪽.

40) 「民族綱領草案に対する九州V第一次意見」(1952年8月初旬), 『朝鮮問題資料叢書』, 第15卷, 146쪽.

41) 「『朝連』復活問題に関する『民戦』中央グループへの意見書」(1952年 12月 15日, 神奈川県民対), 『朝鮮問題資料叢書』, 第15卷, 148-151쪽.

했다. 나아가 재일조선인 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계급투쟁으로서의 일본 혁명에 기반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재일조선인 운동의 계급 운동적 측면을 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라카타 사건과 스이타 사건 등 오사카 지방의 '6.25 투쟁'은 '강령초안'에서 제시된 임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투쟁은 조급함에 기인한 '한탕 주의적 편향'을 범했다고 비판했다.

시가현 대표는 "민족적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가 필요하며, 민족적 요구를 쟁취하는 주된 동력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여 오사카 대표의 문제제기에 찬동했다. 효고 대표도, "조국방위 투쟁을 하려면 조선에 돌아가서 하라"는 일본 인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여 '강령초안'의 민족주의적 편향을 비판했다. 기타 대표들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비판에 동의했다. 다만, 히로시마현 대표는 '조선인 내부의 계급 대립'을 분명히 할 것, 조선인민과 일본과의 관계는 '재일동포'라는 특수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 등을 주장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⁴²⁾ 오사카 지방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반발들은 한덕수의 '강령초안' 비판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의 비판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회의의 토론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나라현 대표의 발언에서 기타 대표들의 견해와 약간 다른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라현 대표는 재일조선인이 "조선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 당에 요구되고 있다고 발언했다.⁴³⁾ 이 발언은, "반일 반동과의 투쟁 바로 그 과정에서 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의 의식은 제고된다"는 오사카 대표의 반론에 의해 비판받았으나, 이 발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다른 대표들과는 달리, 민족의식보다 구체적인 국민의식의 고양을 재일조선인 운동의 발전에 불가결하다고 주장하

42) 『西拓大民対會議の議事録』(52年12月), 『朝鮮問題資料叢書』, 第15卷, 136쪽.

43) 위와 같음, 137쪽.

고 있는 점이다. 나아가 더욱 주목할 점은, 반론을 전개한 오사카 대표를 포함해, 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있는 점이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공화국’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명칭이야말로 그들이 민족으로서의 귀속을 확인하는 조국이었던 것이다.

한편, 이 회의에는 T와 K라는 이름의 간부가 참가했는데, 이들은 중앙으로부터 파견 나온 간부들일 것으로 생각된다. 서부 일본 각지역의 지방위원회 민족대책부 대표들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들은 일부 그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강령초안’은 기본적으로 옳바르다는 입장에서 이를 옹호하고 있다. T는 “조국방위투쟁은 민족적 요구이자 민족적 투쟁형태이며, 기본적 노선인 것”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 이러한 민족적 요구와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미제국주의자와 그 앞잡이 이승만 정권’을 타도해야 마땅하나, 재일조선인이라는 특수조건 하에서는 요시다 정부 타도가 당면과제로 제기된다고 하여, ‘강령초안’의 기본노선을 옹호했다.⁴⁴⁾

다른 한편에서는 ‘강령초안’에 대해 이것마저도 ‘일본혁명’을 위한 지침으로는 미흡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1953년 1월 13일자로 간토 각현의 민족대책부 책임자 회의의 결정으로 제출된 「민족강령초안의 토의에 부쳐서(民族綱領草案の討議について)」는 ‘적 권력’의 규정에 대해, ‘강령초안’에는 ‘미-한-일’의 순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미-일-한’의 순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기본적인 임무’를 규정하는 데에서도 ‘강령초안’에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일본해방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일조선인으로서의 ‘구체적 혁명행동’은 ‘일본혁명운동’이외에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⁴⁵⁾

44) 위와 같음, 139쪽.

45) 『『民族綱領草案の討議について』の関東各県民対責任者会議の決定』(53年 1月 13日), 『朝鮮問題資料叢書』, 第15卷, 135頁.

또한 1953년 초에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민족강령 토의에 대한 야마나카(山中) 동지의 서한(民族綱領討議に対する同志山中の手紙, 이하 서한)」은 특히 오사카 민족대책부의 의견서를 비판했다. 「서한」은 다섯 항목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강령초안’을 제대로 읽지 않았으며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자신들의 경험주의를 지상으로 생각하는 오만함이 있다. 셋째, 중앙 민족대책부의 ‘강령초안’이 중앙위원회의 승인 하에 제출되어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이를 단순히 일개 전문부서의 의견서인 것처럼 취급하여, 기관을 경시하고 있다. 넷째, 소부르주아적인 억측과 시기심이 농후하게 나타나 있다. 즉, 재일조선인 운동의 고참 지도자 가운데 민족적 편향을 나타내는 몇몇 인물과 중앙 민족대책부의 간부 동지들이 모종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쓸 데 없는 억측이 나돌고 있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사카의 의견서는, 사상적으로는 소부르주아적이며, 정치적으로는 섹트주의적이며, 실천적 조직적으로는 경험주의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었다.⁴⁶⁾

이러한 논쟁은 한국전쟁 정전협상이 전개되는 동안 줄곧 이어지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51년 겨울 이후 재일조선인 운동은 이미 내부 대립으로 동력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대립 속에서 통일된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각 지역의 ‘선봉’에서는 조국해방과 혁명에 순수한 열정을 불태우는 젊은이들이 절망적인 투쟁에 동원되고 있었다. 나아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성립 뒤에도 오히려 일본의 재일조선인 운동은, 한편으로는 스파이 색출투쟁을 전개하면서, 일본에서의 혁명의 완수를 위해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53년 11월 23일자에는 조방대 기관지 『선봉』 제1호에 A현 모(某)지구의 조방대로 소개된 한 조방대의 강령과 대원규칙이 소

46) 「民族綱領討議に対する同志山中の手紙」, 『朝鮮問題資料叢書』, 第15卷, 140頁.

개되었다. 강령에 따르자면, 조방대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 공민’으로서, ‘미제의 보호박인 요시다 반동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일본공산당의 노농동맹과의 연대 투쟁’에 나서 ‘민족해방 민주혁명’을 완수한다는 의식으로 투쟁의 전선에 서 있었던 것이다.⁴⁷⁾ 결국 한국전쟁 시기 재일조선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 공민’으로서 ‘일본혁명’의 전선에 서 있을 것을 요구받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이 종료된 상황에서 재일조선인 운동을 일본혁명에 복무시키려는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1954년 2월 일공 중앙조직국에서는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하여(在日朝鮮人運動について)」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2월 방침’을 확정했다. 여기에서 “재일조선인의 요구는 일본국민의 요구와 본질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일치한다”고 단정하고, “일조 양 인민의 공통의 정치투쟁을 발전시켜, 반미 반요시다 반재군비의 투쟁을 재일조선인 자신의 투쟁으로 자각시키고 고양시키는 것”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받아 민전 제14회 중앙위원회에서는 종래의 4개항목 반대투쟁에서 반이승만을 삭제하여 ‘3개항목 반대투쟁’을 내걸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개에 의거하여 도노무라 마사루는 한국전쟁을 거쳐 조국지향의 내셔널리즘이 확립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⁴⁸⁾ 그러나 이는 거듭 강조하건대, 중앙에서 발표되는 문서들에 집중해서 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론이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방에서는 이러한 중앙의 흐름에 다양한 입장에서 반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은 고바야시 도모코(小林知子)가 묘사한 것에 가까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바야시는 이 시기 재일조선인 운동이 일본에 정주하기 위한 ‘생활방위적 의식’과, 조국의 해방과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민족

47) 『先鋒』(祖防隊機關誌, 第1号, 1953年 11月 23日), 『朝鮮問題資料叢書』, 第15卷.

48) 도노무라 마사루, 신유원·김인덕 옮김,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논형, 2010, 482쪽.

해방형 내셔널리즘'의 결합 속에서 전개되었다고 정리했다.⁴⁹⁾

VI. 결론

이렇듯 한국전쟁 시기 일본공산당과 재일조선인 운동은 대일강화를 전후로 한 일본의 정치의 전개에서 매우 큰 충격을 미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정부 전복을 목표로 한 무장투쟁이 시도되었다는 것, 그 자체로 근현대 일본정치사에서 이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정치적 사건은 없을 것이다—제대로 복원되지 않은 역사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전쟁과 일본정부의 관여가 여러 미묘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일본의 주류 정치사 서술에서 한국전쟁 자체가 예외적인 시기로 처리되어 잊혀진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것, 비주류 저항운동의 역사서술에서도 그 과격성으로 인해 이 시기의 운동이 매장하고 싶은 과거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시도된 한국전쟁 시기 재일조선인 운동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의 일본공산당의 무장투쟁 군사노선과 이에 연동한 재일조선인 운동의 중앙조직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동이 내포한 다양한 계기와 결절점들, 그리고 그것들이 반영하고 있는 당시 일본 사회의 궁극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한 절박한 운동으로서는 정당한 관심을 기울여 오지 못했다. 지방에서의 움직임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여기에서 서론에서 소개한 가지무라의 연구에 다시 주목해 보고자 한다. 가지무라는 민전이 조련 사람들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48년

49) 小林知子, 1996, 15-50쪽.

이후 민단에서 이탈해서 조선민주통일동지회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합류한 조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강훈은 전 민단 부의장으로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민족주의자 계열의 활동가였으며, 외형상으로는 민전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등 민전에 의한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가지무라는 이러한 흐름이 본국에서는 없었던 흐름이라고 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특이한 행동과 방식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하나는 조방대의 조직문제이다. 이 조직은 조련의 지도를 받아온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었는데, 형식상으로는 일공의 민대의 지도를 받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일조선인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자 했고, 사실상 독자적으로 움직이며 일본공산당의 군사노선과는 합류하지 않았다고 정리하고 있다.⁵⁰⁾ 그 기원으로 한덕수에 주목하고 있다. 한덕수는 민전이 생길 때부터 민전이 민대를 통해 일본공산당의 지도 아래에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공공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⁵¹⁾

이러한 가지무라의 해석은 일본공산당 운동에서 재일조선인 운동을 분리시킴으로써, 일본공산당의 오류로부터 재일조선인 운동을 변호하려는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거꾸로 형식상으로는 일본공산당과 재일조선인의 운동조직은 서로 독립되어 있었지만—특히 5전협 이후 이 방식은 더욱 분명해졌지만, 운동의 실질적인 내용은 ‘조국방위’를 수단으로 하고 ‘일본혁명’을 최종적 목표로 공유한 연대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적어도 운동의 전면에 선 재일조선인들은 그것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가지무라의 재일조선인 서술 방식은,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분리 배제의 정책을 일본공산당과 재일조선인의 관계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여, 재일조선인 운동을 변호하려다가 일본 정부를 변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

50) 가지무라 히데키, 2014, 78-80쪽.

51) 가지무라 히데키, 2014, 86쪽.

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오류’는 가지무라의 방법이 중앙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국전쟁 시기 미완의 과제로 남은 ‘정주’ 지향 재일조선인의 일본 정치에의 참획의 문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 내의 다민족공존 정책으로의 전환과, 1990년대 글로벌리제이션의 일본적 반영인 지방참정권 획득 논쟁을 통해 4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유혁수와 신기영이 제기하는 ‘날실로서의 ‘사실로서의 재일’의 진행과 ‘변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씨실의 교차/갈등’의 재연이다.

최초의 논쟁은 1985년 강상중과 양태호 사이의 논쟁으로 전개되었다. 강상중은 “조선계 일본인”으로서의 정주화가 동포들의 ‘내국민화’와 ‘천민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일”과 일본 그리고 분단조국의 공통의 역사적 과제”에 자각적일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강상중에 대해 양태호는 정주화가 의문의 여지 없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주화를 적극적으로 사고하여, 일본 사회의 소수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것이 공생의 첫발이며, 강상중이 제시하는 과제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⁵²⁾

이들의 논쟁 이후 정체성의 정치학이라는 방법이 정립되는 것과 맞물려 재일코리안 정체성 논쟁이 촉발되었다. 재일코리안의 정체성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에스니시티(소수민족성)와 네이션(조국지향)을 두 축으로 하고, 그 사이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후쿠오카 야스노리(福岡安則)의 “이화 지향 대 동화 지향”의 구도, 서경식의 “에

52) 강상중과 양태호의 논쟁은 1985년 『季刊三千里』의 42호에서 45호까지 전개된 다음을 참조. 姜尚中, 「『在日』の現在と未来の間」, 『季刊三千里』 42号, 1985夏; 梁太昊, 「事実としての『在日』—姜尚中氏への疑問」, 『季刊三千里』 43号, 1985秋; 姜尚中, 「方法としての『在日』—梁太昊氏の反論に答える」, 『季刊三千里』 44号, 1985冬; 梁太昊, 「共存・共生・共感—姜尚中氏への疑問(II)」, 『季刊三千里』 45号, 1986春. 이상 유혁수, 신기영, 「사실로서의 재일과 ‘변하지 않는 일본’의 교차」, 『일본 비평』 14호, 2016.2. 8쪽에서 재인용.

스닉 마이너리티인가 네이션인가”라는 질문이 모두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⁵³⁾ 이러한 이항대립적인 인식들은 신기영이 지적한 대로, “일본 내 소수민족으로서 (중략) 일본 사회 내에서 공생의 길을 택함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모국과 민족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며 모국귀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정주국에서 외국인으로 존재할 것인가의 선택”을 강요한다.⁵⁴⁾ 그런데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연원을 찾아가 보면 한국전쟁 시기 재일조선인 운동 내부의 노선 투쟁이 하나의 뿌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의 한국전쟁이 여전히 휴전체제로서 문제의 해결을 유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재일조선인 운동에서도 한국전쟁은 여전히 휴전체제로 남아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논쟁은 다시 서경식의 주장과 이에 대한 조관자의 비판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 서경식은 글로벌리제이션의 파고가 재일조선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탈민족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던 현실에서 ‘민족’으로서 재일조선인이 위치를 재확인하려 했다. 즉, 그는 모든 재일동포가 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재일조선인’으로 총칭되어야 하고, 나아가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해외동포를 새로운 ‘네이션’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⁵⁵⁾ 나아가 “조국에서의 민주화의 추진과 민족통일의 실현, 나아가 재외동포까지 대등한 구성원으로 삼는 전민족적 ‘네이션’의 형성이라는 정치적 과제들이, 재일조선인에게도 자기해방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⁵⁶⁾

53) 福岡安則, 『在日韓国・朝鮮人』, 中公新書, 1993; 서경식, 「재일조선인이 나아가갈 길: ‘에스닉 마이너리티’인가 ‘네이션’인가」, 『창작과비평』, 1998 겨울; 신기영,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아인」, 『일본비평』 14호, 2016.2. 41~42쪽.

54) 신기영, 2016.2. 42쪽.

55) 서경식, 「재일조선인의 위기와 기로에 놓인 민족관」, 『역사비평』, 1996 여름; 조관자, 「1990년대 이후 한국에 소개된 재일조선인 지식인의 민족담론: 서경식의 ‘식민주의 저항’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일본비평』 14호, 2016.2. 59쪽.

56) 서경식, 1998 겨울, 354쪽; 조관자, 2016.2. 59쪽.

조관자는 “일본사회의 소수자로서 공생을 모색하기보다 민족의 ‘네이션’으로 돌아가라는 논리”를 펴는 서경식의 “비타협적 민족담론”과 이에 입각한 “조국지향적인 민족운동론”이 “일본의 배외주의와 ‘협한’ 입지를 강화하고, 이것이 다시 일본의 식민주의와 배외주의를 비판하는 ‘반일’의 논거로 상승 작용한다”고 하여 비판하고 있다.⁵⁷⁾ 그런 한편 조관자는 서경식이 ‘기민’과 ‘난민’ 담론을 펴면서, 재일조선인 스스로가 정치적 경제적 권익을 추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서경식의 주장이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경식이 언급하지 않은 사실들 가운데 하나로 조관자가 지적하는 것은 “일본의 패전 직후 재일조선인 활동가들이 ‘승전국민’과 ‘해방인민’으로 자처하며 일본의 혁명운동에 관여했”다는 사실이다.⁵⁸⁾ 서경식이 함구하고, 조관자가 지적한 이 부분이 바로 이 글에서 해명을 시도하고자 했던 역사였다. 이 시기의 역사를 복원해서 서경식과 조관자의 주장을 재검토하는 작업에서 폐쇄회로에 갇힌 논쟁이 새로운 미래로의 출구를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다시 한국전쟁 시기의 재일조선인 운동으로 돌아가 보자. 한덕수가 주장했던 ‘조국지향의 운동은 재일조선인을 구분하고 배제하려는 전후 일본의 대 재일조선인 정책에 가장 부응하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 정주하는 소수민족으로서 일본의 정치에 참획하려 했던 일공 민대와 민전의 노선은, 일본을 여러 민족 들 사이의 평등과 공존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다민족국가로 재편하는 데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실패하기는 했어도, 재일조선인을 배제하는 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었던 당시의 일본 정부에 가장 정면에서 도전하고 그 잘못을 드러내는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운동이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있

57) 조관자, 2016.2. 79쪽.

58) 조관자, 2016.2. 74쪽.

는 ‘잘못된 시기’에, 폭력혁명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되었다고 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에 가장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던 재일조선인 대중들은 비록 ‘잘못된 시기’일지언정, 방법을 바로 잡으면서, 즉 폭력혁명을 거부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 했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이 가장 조직적으로 전면에 등장했던 것이 1952년 12월의 서일본지구 민족대책부 확대간부회의였다. 이들은 중앙의 일공파가 ‘강령초안’을 제시하며, 재일조선인 운동을 일본이라는 후방기지에 투입된 ‘낙하산 부대’로 규정하고, 생활거점에서의 생활방위투쟁을 소홀히 하여 한국전쟁의 현실에 재일조선인 운동을 직결시키려고 하는 데 대해 저항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지방의 일공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그들이 의거했던 신강령의 ‘잘못된 방법’이 역사에 남긴 강렬한 인상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도 일체 합구하고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진 뒤,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재일한국/조선인사회로부터 모두 버림받은 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시기 재일조선인 운동의 역사를 역사의 미궁에서 빼내 복원하는 것, 그것이 의미를 갖는 일이라면 그것은 재일조선인 사회의 소수자들로 남은 지방의 재일조선인들이 받은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는 데 있다. 그것이 ‘정주’ 지향과 ‘조국’ 지향의 무한 대립이라는 폐색상태에 빠져 있는 재일한국/조선인의 미래 논쟁에 새로운 상상의 창구를 열어주는 일이라 믿는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6년 5월 19일

논문 심사일 : 2016년 5월 31일

게재 확정일 : 2016년 6월 3일

참고문헌

〈1차 자료〉

- 姜徹 編, 『在日朝鮮・韓國人史總合年表』, 雄山閣, 2002.
-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全5卷), 三一書房, 1976.
-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戰後編』(全10卷), 不二出版, 2000.
- 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全15卷, 補卷), アジア問題研究所, 1982~1991.
- 法務府特別審査局, 『日本共産党の動向(自昭和24年8月至昭和25年8月)』, 1951.8.
『前衛』 14号(1947.3.1).
『前衛』 16号(1947.5.1).
- 鄭東文, 「新しい段階における在日本町先人運動と共産主義者の任務(1948年9月8日, 関東地方朝鮮人党員會議における一般報告)」.
- 「朝連, 民青の解散について」1949年9月8日, 日共中央委員會組織活動指導部, 市民対策部から各府県地区委員會宛て指令.
- “Illegal Activities” (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HH, GS(B)-04258)
- “Immigration Law” (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HH, GS(B)-04258)
- “Korean Organizations: General” (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HH, GS(B)-04258~04261)
- “Korean War and Peace” (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BB, GS(B)-04251~04254)
- “Organizers” (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HH, GS(B)-04258)

〈단행본, 논문〉

- 가지무라 히데키, 김인덕 역, 『해방후 재일조선인 운동(1945-1965)』, 선인, 2014. (원저는 1980년)
- 남기정, 「한국전쟁과 재일한국-조선인들의 민족운동」, 『민족연구』, 2000.
- 도노무라 마사루, 신유원·김인덕 옮김,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논형, 2010.
- 서경식, 「재일조선인의 위기와 기로에 놓인 민족관」, 『역사비평』, 1996 여름.
- 서경식, 「재일조선인이 나아갈 길: ‘에스닉 마이너리티’인가 ‘네이션’인가」, 『창작과비평』, 1998 겨울.

- 신기영,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 『일본비평』 14호, 2016.
- 유혁수·신기영, 「사실로서의 재일과 ‘변하지 않은 일본’의 교차」, 『일본비평』 14호, 2016.
- 조관자, 「1990년대 이후 한국에 소개된 재일조선인 지식인의 민족담론: 서경식의 ‘식민주의 저항’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일본비평』 14호, 2016.
- 荻野富士夫, 『戦後治安体制の確立』, 岩波書店, 1999.
- 加藤晴子, 「在日朝鮮人の処遇政策確定過程に見られる若干の問題について－1945年から1952年」, 『日本女子大学紀要(文学部)』, 1984.3.
- 姜尚中, 「『在日』の現在と未来の間」, 『季刊三千里』 42号, 1985夏.
- 姜尚中, 「方法としての『在日』－梁太昊氏の反論に答える」, 『季刊三千里』 44号, 1985冬.
- 金太基, 『戦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SCAPの対在日朝鮮人政策1945-1952年』, 勁草書房, 1997.
- 小林知子, 「戦後における在日朝鮮人と『祖国』－朝鮮戦争期を中心に」, 朝鮮人研究会編, 『朝鮮史研究会論文集』, 34号, 緑蔭書房, 1996.
- 鄭榮桓, 『朝鮮独立への隘路－在日朝鮮人の解放五年史』, 法政大学出版局, 2013.
- 南基正, 「朝鮮戦争と日本－『基地国家における戦争と平和』」, 東京大学大学院博士論文, 2000.
- 西村秀樹, 『大阪で戦った朝鮮戦争－吹田枚方事件の青春群像』, 岩波書店, 2004.
- 福岡安則, 『在日韓国・朝鮮人』, 中公新書, 1993.
- 朴慶植,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三一書房, 1989.
- 梁永厚, 『戦後・大阪の朝鮮人運動, 1945-1965』, 未來社, 1994.
- 梁太昊, 「事実としての『在日』－姜尚中氏への疑問」, 『季刊三千里』 43号, 1985秋.
- 梁太昊, 「共存・共生・共感－姜尚中氏への疑問(II)」, 『季刊三千里』 45号, 1986春.
- 吉川光貞, 「特別審査局の沿革と使命」, 竹前栄治, 『戦後労働改革』, 東京大学出版会, 1982.
- 脇田憲一, 『朝鮮戦争と吹田枚方事件－戦後史の空白を埋める』, 明石書店, 2004.
- 和田春樹, 『朝鮮戦争』, 岩波書店, 1995.
- Kim, Tae Ki, "The Korean War and Korean in Japan: An ActorAnalysi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17 No.2, December 2014.

Abstract

The Movement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during the Korean War, Revisited: Focusing on the Local Organizations

Kijeong NAM

This article aims to reveal a new demension in the movement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hrough tracing the trends of the movements developed in local areas of Japan, using the raw materials of GHQ/SCAP documents.

The movement oriented to the nation or fatherland, which was propelled by the 'fatherland faction' was the way which satisfied the policy of Japanese government which wanted to separate and exclude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On the contrary, the movement to participate to Japanese politics as an ethnic minority group which was carried out by 'JCP faction' was the line which can contribute to transform Japan into a democratic multi-ethnic state which guarantee the equality and coexistence among every ethnic groups.

Though it failed as a political line, the latter was the right one in the meaning that it challenged Japanese government's wrong policy which aimed to exclude Koreans from Japan. The main problem was that JCP faction's movement was attempted in a wrong time, with a wrong means, i.e., in a time of the Korean War, with a militaristic means. Nevertheless, though in a wrong time, the Korean activists in local areas of Japan had left traces in which they tried hard to mend their ways, and to meet the needs of age.

Key words

The Korean War, Korean Residents in Japan, local organization, nation, ethnic minority